

2023. 5. 22.

수 신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장

제 목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안) 발의

위의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 끝.

발의자 : 한성환
(발의자 서명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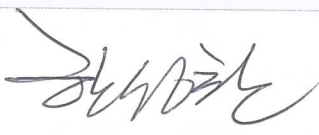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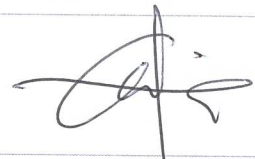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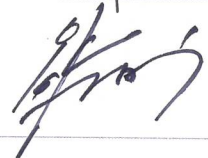
결	담당자	담	당	국	장	의	장
재	이형미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의회사무국-3202 (2023. 5. 22)

결의안 동의자 서명(날인)서

☐ 동의건명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련 번호	의 원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한 성 환		
2	김 시 욱		
3	이 상 우		
4			
5			
6			
7			
8			
9			
10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한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
----------	-----

제출연월일: 2023. 5. 22.

발의자: 한성환

동의자: 김시욱, 이상우

1. 제안이유

-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공식 결정했고,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2022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했다.
-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해 물질을 정화해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주장하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제한적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울주군은 한·일 해협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어, 오염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울주군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주문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3. 보내는 곳

국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울산광역시(기획조정실장), 울주군수(기획예산실장)

4. 붙임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까지 지하수와 빗물 유입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이 오염수의 양은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톤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2022년 7월, 이를 정식 인가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해저 배수터널을 통해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해 물질을 정화해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제한적 데이터로는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 등의 우려다.

특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63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 기술

로는 제거할 수 없는 물질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해류를 타고 수 개월 안에 우리나라 전 해역을 오염시키게 된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류 방침은 일본 전국어업협동 조합연합회, 일본 시민 등 자국민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국민 뿐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안정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낀 울주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공개 검증을 통해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